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金炯昨 의원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부에 맡겨야”

■ 대담 : 李光榮 (전북대 초빙교수 / 본지 편집위원)
■ 일시 : 7월 5일 오후 2시 ■ 장소 : 위원장실

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도 위원회를 자주 옮겨 다니기 보다는 한 곳에서 전문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깊이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폐해는 조심해야겠지요.

■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관련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에서 부처간 관할권 다툼을 조정해주는 역할도 국회가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처별 과학기술 정책은 있어도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이 없다는 비판의 소리를 오래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직도 바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연구개발비의 나눠먹기식은 곤란

올바른 지적입니다. 매년 4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기부가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부처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부터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기부의 위상이 제고되지 않는 한 악순환은 계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1월 5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관련 부처에서 관할하던 연구기관들의 소속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은 기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정위) 위원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취임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흔히 상임위원장은 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의원이면 누구나 하고 싶은 자리이지요. 저 역시 기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평소 우리나라의 미래가 IT, BT, NT에 달려있다고 주장해 왔기에 더욱 그러하지요.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김위원장님은 정치학 박사로 과학기술과는 거리가 먼 분야이면서도 92년 14대 국회 이래 3대를 계속해서 과정위에 몸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저의 성격 탓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곳저곳 자리를 옮기는 스타일이라기 보다는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제대로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 국회도 전문화되고 심층화되어야 합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신임위원장 김형오(金炯晔)의원은
본지와 특별인터뷰에서 “과학기술부의 위상을 강화시켜도 선진국을 따라잡기 힘든데
과학기술분야의 R&D경험이 없는 총리실로 출연연을 이관시킨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로 나뉘어져 총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연구기관의 총리실 이관은 애초에 기대했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나는 애초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은 과기부에 맡겨야 합니다. 과기부의 위상을 강화시켜도 선진국을 따라잡기 힘든데, 과학기술분야의 R&D 관리경험이 없는 총리실로 출연연을 이관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게다가 부처 이기주의가 심한 우리나라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독일의 막스 플랑크(Max Plank)연구소와 헬름홀츠(Helmholtz)연구소를 본 딴 연구회모델의 성공을 기대한 것이 오히려 이상했죠.

과학기술 출연연의 총리실이관 반대

경제가 어려울수록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는 오히려 늘려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원예산을 대폭 줄이고 PBS 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연구원들이 본래의 목적인 연구는 뒷전이고 과제를 수주하는 보따리장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고급 두뇌들이 해외나 기업으로 유출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사기진작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 과기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근 닷컴 위기론, 벤처 거품론 등 바람직하지 못한 벤처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가요.

나는 이러한 현상이 닷컴기업의 위기라기보다는 닷컴기업에 대한 환상의 거품을 빼기 위한 조정기라 생각되며, 이는 국내 벤처산업 발전을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상당수의 벤처기업들이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보다는 투자 유치와 가입자 확보에만 열중했던 당연한 결과지요. 또한 우수한 벤처기업의 양성보다는 단기투자를 통한 자금회수에 급급했던 벤처캐피탈의 투기행태도 위기를 가속시켰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상황을 위기로까지 보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봅니다. 국내 벤처기업의 창업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올해 들어 8대 도시의 중소기업 창업은 작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4백개의 벤처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간 코스닥시장에서 과대평가되었던 닷컴기업의 주가하락을 제외하면, 우리 벤처사업은 여전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부는 최근 위축된 벤처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비전있는 닷컴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 지원에 만족하지 말고 이들이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벤처업계는 투철한 직업의식과 자본주의적 도덕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기업가치를 높이라는 노력과 함께 바람직한 수익모델의 개발,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인수합병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노려야 할 것입니다.

■ 유망한 미래산업의 하나로 흔히 우주산업을 꼽고 있는데 김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주개발산업을 육성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2000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누락되어 있던 우주센터

개발 사업비 10억원을 책정한 것도 본인입니다. 그러나 발사각이 15°에 불과한 지역에 위험부담을 안고 우주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로켓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사대야 외국의 것을 사용하면 되죠. 작년 국감에서 주장했듯이 동북아공동체를 구성해 우리의 것을 특화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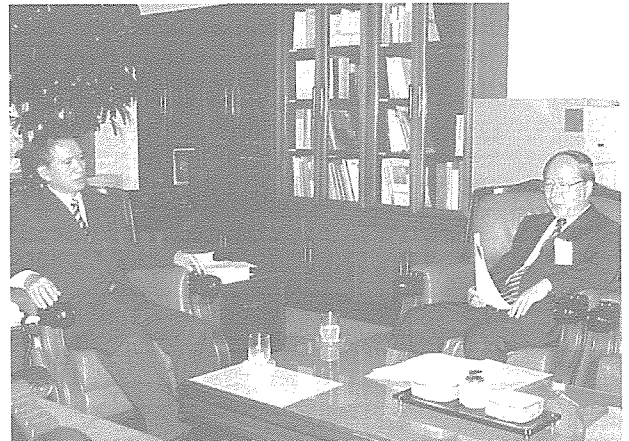
■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을 둘러싸고 과학자들과 종교계, 시민단체간의 논쟁이 한창인데 이에 대한 김위원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생명윤리기본법 - 과학연구·질병치료 걸림돌 안돼야”

생명의 존엄성은 최고의 가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과학의 연구와 질병치료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978년 영국에서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루이스 브라운이 태어난 이래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후 30만을 상회하는 불임환자를 치료한 획기적인 보조생식술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생명공학을 비롯한 여러 기존연구와 기초학문들이 발전해야 할 단계이고, 정부와 여론도 과학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윤리적 측면을 결코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법제화할 단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 불법 도감청·IMT2000 등 최근 과정부에서 이슈화된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발전의 뒤편길에 이유없이 스러져 가는 많은 인류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기회균등이나 제도적·사회적 차별이나 박해가 있어서는 안되지요. 음지와 양지가 거듭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지 인위적으로 조성되면 불만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책임감이 도사리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정부에서의 밥그릇 수도 부인할 수 없겠죠. 상임위 경력으론 내가 최고참이다 보니 이



金炯晔위원장(왼쪽)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과 대답하고 있다.

슈가 발생하면 당이나 동료 의원들이 나와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보기엔 마치 내가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비쳐졌나 봅니다. 다 동료 의원들 덕이죠.

■ 과정위는 여·야 의원간에 마찰이 적고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이라는 큰 명제에 충실한 상임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이럴 때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조율해 나갈 계획인지요.

과정위는 중심개념이 ‘과학과 기술’이기 때문에 이념과 사상, 정당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이 합리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야를 초월해 입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속의원들의 꾸준한 노력도 간과할 수 없겠지요. 선의의 경쟁관계가 과정위를 공부하는 상임위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중재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는 한편, 올바른 과학정책이 수립되도록 의원들간,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조정에 최대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과학기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자에게 항상 고마울 따름입니다. 연구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①7